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빈집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지자체들

경기도 도시재생과 재생지원팀
2025.6.23.

경상남도 건축과
2025.7.3.

경기도, 빈집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경기도는 '빈집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업무 지침서)'을 마련해 시군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지난 5년간 화재, 범죄, 쓰레기 대량 투기, 다수 민원 발생 빈집은 3년 내 빈집 정비 ▲철거명령 대상 기준 구체화 ▲빈집 정비 성과 목표 수립 ▲매매거래 지원 도입 ▲빈집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실시 ▲소유자 불명 빈집에 대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권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담겼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빈집정비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시가 빈집 철거 공사를 직접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 방식을 다각화하였다. 그러나 시에서 '철거명령'이나 '안전조치 명령' 대상 빈집을 적극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빈집 소유자의 신청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었다. 도는 시군에서 실행력 있는 빈집정비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이번 가이드라인을 안내하며, 빈집이 30호 미만인 시군은 별도 외부 용역 없이도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경상남도, 도 차원의 빈집관리 종합계획 수립

경상남도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빈집 문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경상남도 빈집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이행에 나선다.

도는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정비 및 안전확보 ▲활용사업 확대 ▲민간참여 기반 조성 등 4대 전략을 설정하고, 총 14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방치에서 활용으로, 격차에서 균형으로, 소멸에서 지속으로'라는 비전을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도시·농어촌 간 달랐던 빈집 정의와 관리 기준을 정비할 통일된 조례를 마련하고, 광역 단위 빈집 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인 '빈집애(愛) 플랫폼'을 구축해 빈집의 발생, 현황, 활용 정보를 관리한다. 또한 '경상남도 빈집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민간 전문가와 협업해 내실 있는 지역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 나간다. 특히 빈집 밀집 구역에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접목한 '안심골목길 조성사업'도 병행해 주민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빈집애(愛)' 플랫폼에 빈집 매물을 공개하고, 중개업체와 연계한 거래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민간 중심의 빈집 거래 활성화도 꾀하고 있다. 협업 공인중개사에는 활동비를 지원하고, 소유자에게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체계도 도입할 계획이다.